

외형은 성장했으나 산업구조는 여전히 취약해

경기침체 여파로 하반기 성장세 주춤...
인터넷 서점의 약진 두드러져

올 한해 출판계는 전반적으로 외형상 성장세를 나타냈다. 특히 인터넷 서점이 새로운 유통망으로 각광받으면서 매출이 수직 상승했다. 하지만 도서유통의 근간인 중소형 서점들이 몰락하면서 상체는 튼튼하나 하체는 허약한 기형적 구조를 보였다. 올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멀티미디어적 출판환경이 정비됐고, 도서관에 대한 정부정책도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올해 도서 유통업계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반디앤루니, 영풍문고 강남점 등 대형서점이 강남에 개장한 반면, 중소형 서점의 폐업·전업은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인터넷 서점의 약진이 눈부실 정도로 두드러졌다. 대형도매상의 매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대형화·양극화 뚜렷해진 서점업계

대형서점은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평균 약 8~15% 성장했다. 서점 총매출액은 교보문고가 15%, 영풍문고가 10%, 종로서적은 8% 늘었다. 주로 상반기에 매출액이 크게 신장한 반면, 9월 이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분야별로는 컴퓨터, 경제경영, 아동서가 꾸준히 늘어났고 인문사회과학과 잡지, 취미실용 분야는 저조했다.

인터넷 서점의 활성화와 서점의 대형화 추세에 밀려 중소형 서점들은 급격하게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서점수가 4595개점이었으나 올해는 3450개점으로 25% 감소했다. 매출액은 46%, 종업원수는 40%나 줄었다. 이런 매출 감소가 지속된다면 임대료 및 인건비의 압박으로 연간 700~1000여개 중소형 서점이 폐업 또는 전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도매상의 올해 매출신장세도 호조를 보였다. 이는 IMF 이후 도매상 부도에 따라 경쟁

업체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출판협동조합은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118% 증가했고, 한국출판유통도 지난해 450억원에서 530억원으로 신장했다. 거래하는 출판사와 서점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조합과 유통은 조합원수와 거래출판사가 100여개사 정도 늘었다. 거래 서점수는 조합이 매달 3~4개, 유통은 지난해에 비해 300여개가 증가했다.

올해는 특히 인터넷 서점이 호황을 누렸다. YES24는 올해 매출액이 160억원을 돌파해 지난해에 비해 약 1500% 정도 성장했다. 회원수가 30만명을 넘어섰고 일일 방문자수도 6만명에 이른다. 알라딘은 매출액이 지난해 7월 3억3천만원에서 올해 11월에는 80억원으로 급신장했다. 구매고객은 지난해 1만3천명에서 9만5천명으로 늘었다. 북스포유도 매출액이 전년도 1억7천만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상승했다. 회원은 현재까지 20만명을 확보했다. 제휴 사이트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들 대형 인터넷 서점들은 내년도 경기를 낙관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에 '전송권' 조항 신설돼

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개막에 따라 국제 출판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정저작권법이 공포·발효돼 저작권 환경이 국내 출판계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올해 1월 12일 공포되고 7월 27일 시행령이 발효된 개정저작권

권법은 저작물의 '전송권'을 명시해 멀티미디어 시대의 출판환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가장 특이한 사항은 인터넷 등 온라인상 저작물 송신에 대한 '전송권' 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통신으로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전송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출판사가 전자책을 제작하거나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저작권법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도서관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 전송을 허용한 조항이었다.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도 도서관 내에서 열람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복제 및 다른 도서관으로 전송하는 것을 인정해 출판계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3조에서는 디지털 복제를 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의 범위를 축소했다.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사적 복제의 범위에서 제외해 출판물에 대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했다. 그동안 저작권법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학가 등에서 불법 복제가 판치는 현실을 방지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복제에 의한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대한출판문화협회·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개막되면서 올해에는 저작권 문제가 국내 출판계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사진은 <개정 저작권법 및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설명회> 모습.

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이 주축이 돼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설립했다.

그밖에 저작권 등록범위를 확대하고 등록된 저작권 관련 사항을 침해한 자에 대해 과실추정 규정을 신설했다. 출판권 등록에 출판권 설정도 포함돼 앞으로 출판권이 등록되면 제3자에 대한 대항효력이 있게 된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시민단체에서 도서관운동에 나서기도

올해 도서관계의 가장 큰 이슈는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의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해 도서관을 국민들의 핵심 지식기반 시설로 자리 잡게 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올해부터 2002년까지 전국 공공도서관과 일부 학교도서관, 문고에 정보화 시설을 설치하고 각급 도서관이 소장한 지식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DB화하는 것이 사업내용의 골자다. 이 사업에는 총 3천68억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다.

이 계획의 최종목표는 국민들이 안방에서 국내외 지식자원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도서관협회 이용훈 기획부장은 "이 계획은 무엇보다 정부에서 도서관을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도록 잠정 합의해 향후 국가 도서관 정책의 기본골격

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도서관은 양적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도서관협회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지난 1998년 381관에서 1999년 말 현재 400관으로 늘었고, 올해도 공공도서관이 꾸준히 증설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1구 1도서관정책과 경기도의 도서관 발전정책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의 체계적인 도서관정책이 주목받았다. 경기도는 도서관 발전정책을 올해 도의 주요 정책으로 선정하고 도 차원에서 도서관 발전을 주도할 '경기도립 사이버 중앙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했다. 국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 시스템(KOLASⅡ)을 개발, 전국 도서관에 보급해 도서관 정보화와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다양한 도서관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 것도 올해의 수확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11월 30일에는 도서관계와 교육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가 출범해 범국민적인 학교도서관 운동을 주도해나갔다. 올해 6월에는 문화계획을 위한 시민연대에서 '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올 한해 인쇄업계는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렸다. 관세청의 인쇄업계 수출입 동향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인쇄물 수출액이 지난해에 비

해 46.6%가 증가한 1억8천여만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설계도와 도안분야의 수출성과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1.5%나 늘어났다. 그 다음으로는 인쇄서적 및 리플렛, 캘린더순이었다. 반면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악보 등은 크게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인쇄물 수출 2억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난으로 고심하는 인쇄업계

인쇄물 수출 못지 않게 수입물량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9월까지 수입된 인쇄물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6% 늘어난 1억4천여만 달러였다. 이는 인터넷 서점의 증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인쇄서적 소책자 및 리플렛이 55% 급증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인쇄문화협회는 앞으로 인쇄서적류와 정기간행물을 중심으로 인쇄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인쇄 기자재 부문에서는 수출이 소폭 상승에 그친 반면 수입은 대폭 증가했다. 올 9월까지 인쇄 기자재 수출액은 8% 증가한 데 비해 수입액은 154% 늘어났다. 이에 따라 IMF 직후 별 차이가 없던 무역수지 적자폭이 올 9월까지 2억6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필름출력기, CTP장비 등 프리프레스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 도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인쇄기자재 수입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인쇄업계는 최악의 인력난을 겪었다. 올들어 인력난이 심화된 이유는, 인쇄업체들이 IMF 당시 리스료 부담 때문에 인쇄기계를 대량 매각했다 경기가 다소 회복되자 다시 인쇄기계 수입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IMF 당시 전체 인쇄 근로자 가운데 7%에 해당하는 5천여명이 현장에서 떠났지만 이들이 현장에 돌아오지 못한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단체수주의계약 품목이 매년 축소되는 추세여서 올해도 20%를 줄여야 하는 처지다. 또한 내수부진과 업체간 과당·출혈경쟁에 따른 판매부진과 채산성 악화에 따라 어음부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질적인 덩핑수주를 근절하지 않으면 채산성이 더욱 악화돼 대량 부도사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박천홍 기자